

공소청 국감 달군 李 公소취소 공방… 檢 大行 “지시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野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 작업인가”
與 “야당 공소취소 주장 근거 빈약”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22일 검찰청 폐지 후 열린 첫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두고 여야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펴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이에 개입해 중용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보라고 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 중에 항소심에 가 있는 사건들은 진상조사단 대상이 아니다. 딱 1심에 있는 것들만 문제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이 대행에게 물었다. 이 대행은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연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괴격 사건을 검찰 미래위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보고 한 것은 맞나”라고 하자 이 대행은 “맞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서 각 검찰청에 수사 기록을 받아서 열람하고 수사팀에 서면 질의를 보내서 답변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들이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며 “아주 옛날에 끝난 사건들이 아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이 대통령이 피고인 인데,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됐

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수사 기록을 다시 열람하면서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는 것은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형사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서 하면 된다”며 “구체적

인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데 공소취소를 중용하는 말까지 했다. 잘못하면 사고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사고를 하면 되지, 취소를 왜 하나”라며 “(결국) 공소취소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에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다. 구자현 전 대행 참석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 언급했던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임 청장 대행과 오찬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엔 카메라가 없으니 특정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라고 했나”라고 묻자 이 대행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 그런 요청을 한다면 응할 것인가”라며 “흑이 백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 때 검찰 독립이 이뤄졌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됐나. 12일 만에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4명이 바뀌었고, 새 지휘부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 덮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반복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이 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공소 취소 대상이 1심 중인 재판에 한정적이고 공소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하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급감에 ‘책임론’

민주 “단기 수익률로 평가해선 안 돼”
국힘, 선거 전 증시 부양 의혹 제기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민연금 이 약 100일만에 약 182조원 가량의 역대 최고 수준의 손실액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이 1~7월까지 전세계 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반도체 주식 호황 등에 힘입어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9조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6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보유 주식 평가액은 총 333조5330억원으로 석달 만에 182조3963억원이 증발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척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은 14.84% 세계 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덧붙였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

존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량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도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 2064년이었던”며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 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이야말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오늘 결론

2심 판결서 시장직 상실 여부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오 시장이 이번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 측이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김씨가 약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익산 초등학교생들과 체육한마당
에서 학생들과 함께 ‘볼볼공 채우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행복학교 체육한마당

李 “잠재성장률 반등, 질적 성장 이어져야”

“대·중기 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마중물로 삼아 국가 전체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양극화 심화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면서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